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CONTENTS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2024-4호(통권 제16호)

발행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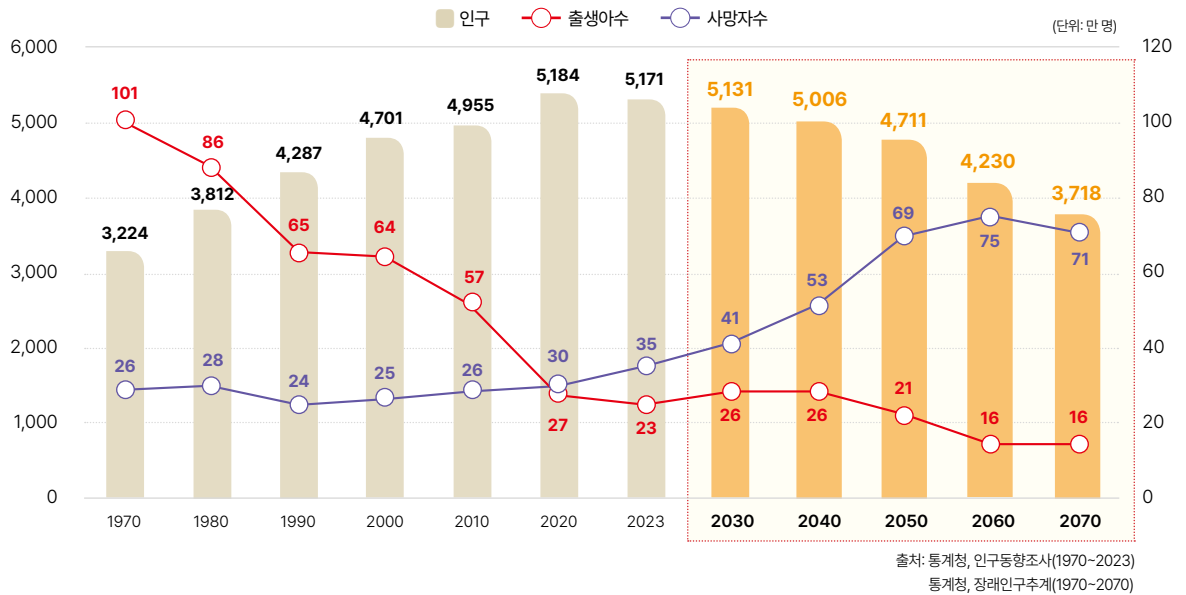
발행처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01. 인구	01
장래인구추계,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시도별 합계출산율,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02. 혼인	03
혼인건수 및 인구 1천 명당 혼인율 추이	
평균 초혼 연령, 연령별 혼인율	
03. 교육	04
초·중·고 학생 수 감소 및 전국 학교의 폐교·소규모화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	
04. 주거	06
신혼부부 가구 주거 및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청년가구 주거 통계	
05. 노동	08
성별 고용률 및 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06. 의료	10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증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감소	
07. 연금	11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적립금 현황	
국민연금 재정추계	
08. 국방	12
연말병력 변화 및 연도별 현역병 판정비율	

▶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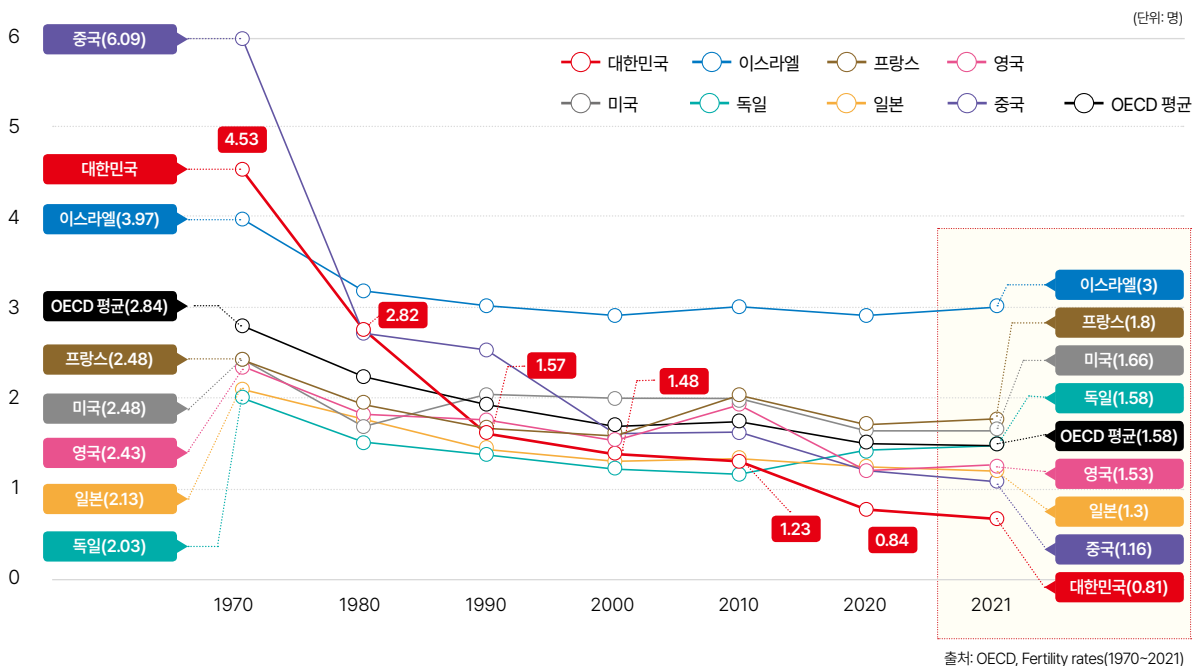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통계청에서 인구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0년 최대 5,184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70년에는 3,71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 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 23만 명이었고, 사망자수는 1970년 26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35만 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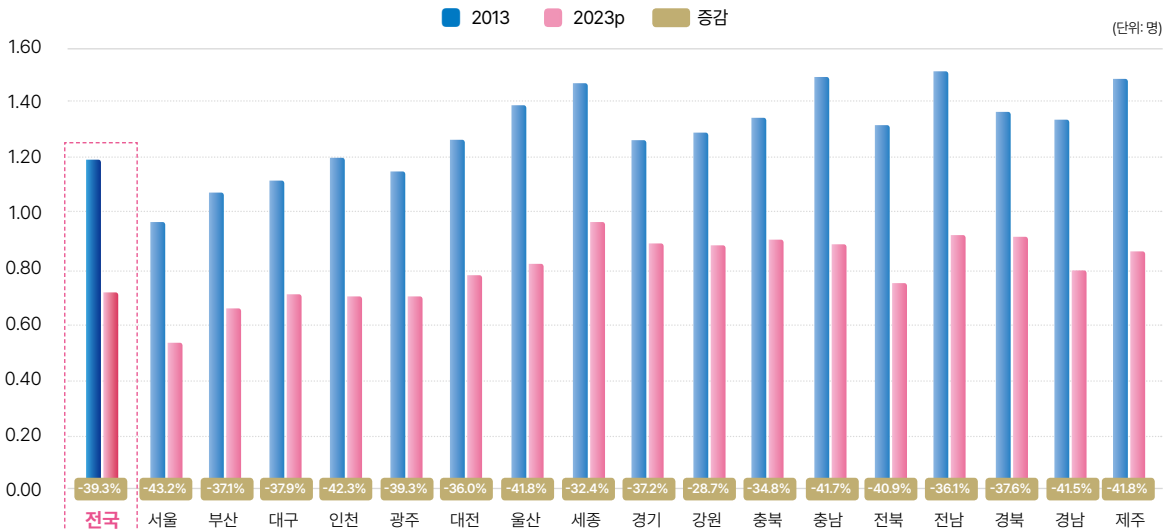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2021년에는 0.81명이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및 중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약 절반에 해당한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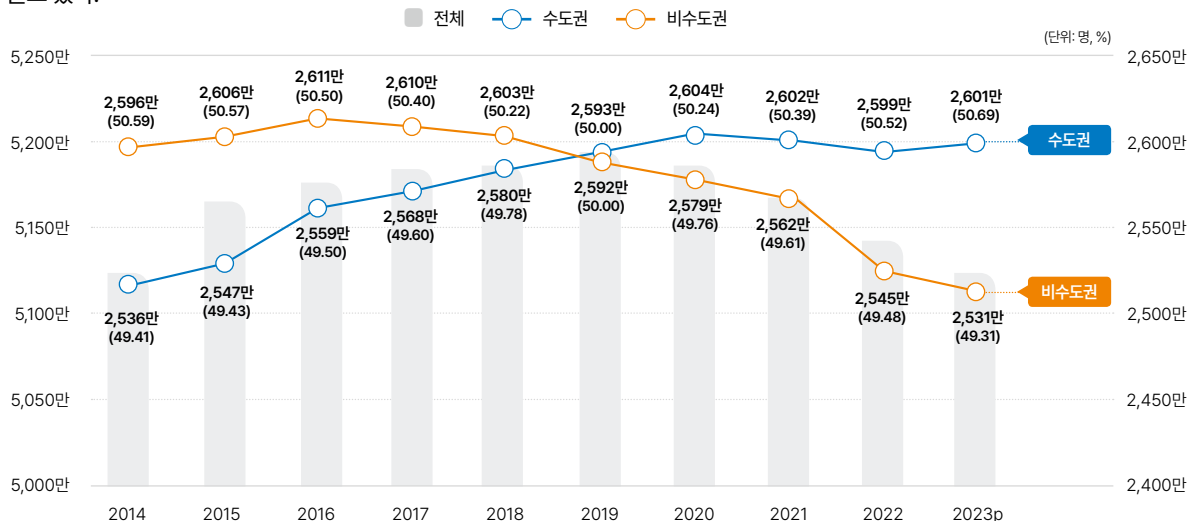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이다. 2013년과 비교해 39.3% 가장 감소한 수치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모든 시도에서 1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 대를 유지하던 세종시도 2023년에는 1명 미만(0.97명)으로 내려앉았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3.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4.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2014~2023p)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약 2,601만 명이다. 이는 비수도권 인구인 약 2,531만 명보다 약 70만 명이 많은 수치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이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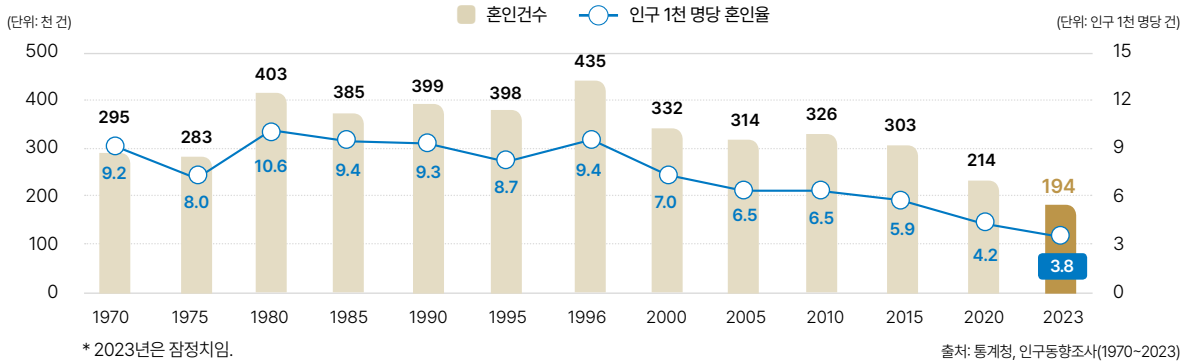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

▶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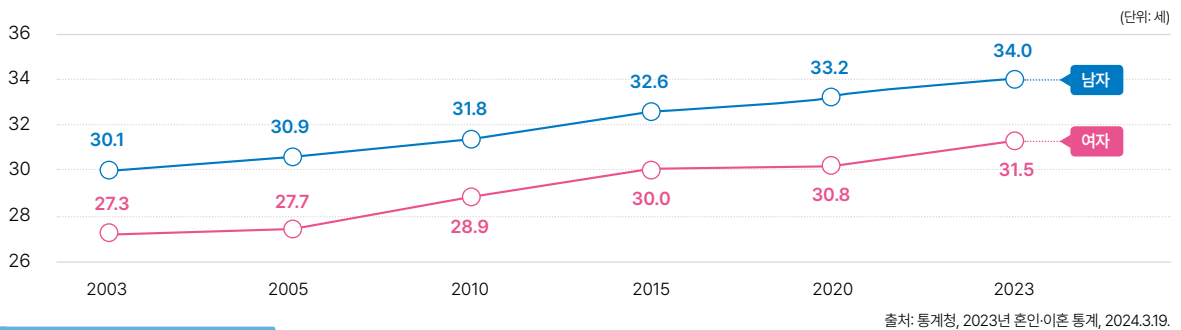
혼인건수 및 인구 1천 명당 혼인율 추이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1996년 43만 5천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점 감소하여, 2023년에는 19만 4천 건이었다. 2023년에 인구 1천 명당 혼인율은 3.8건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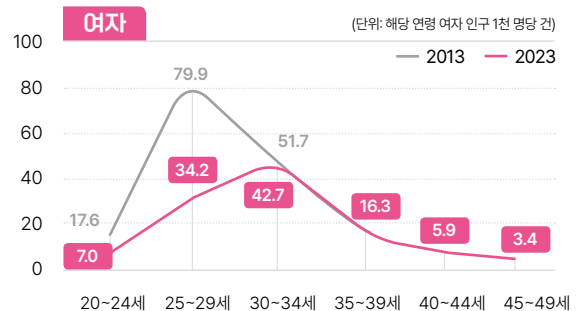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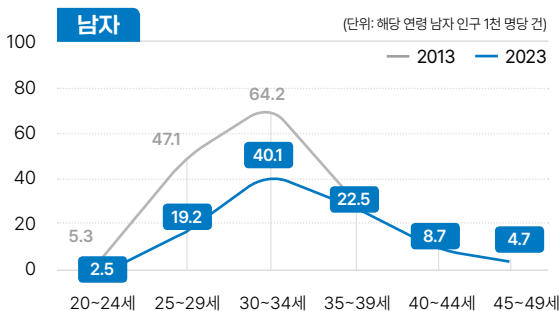
평균 초혼 연령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혼인 시기가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3년 30.1세였고, 2023년 34.0세였다. 여자의 경우 2003년 27.3세였고, 2023년에는 31.5세였다.



연령별 혼인율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2013년에 비하여 2023년에 남녀 모두 20대 후반(25세~29세)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대 후반 남자의 혼인율은 2013년 47.1건에서 2023년 19.2건, 여자의 경우 2013년 79.9건에서 2023년 34.2건으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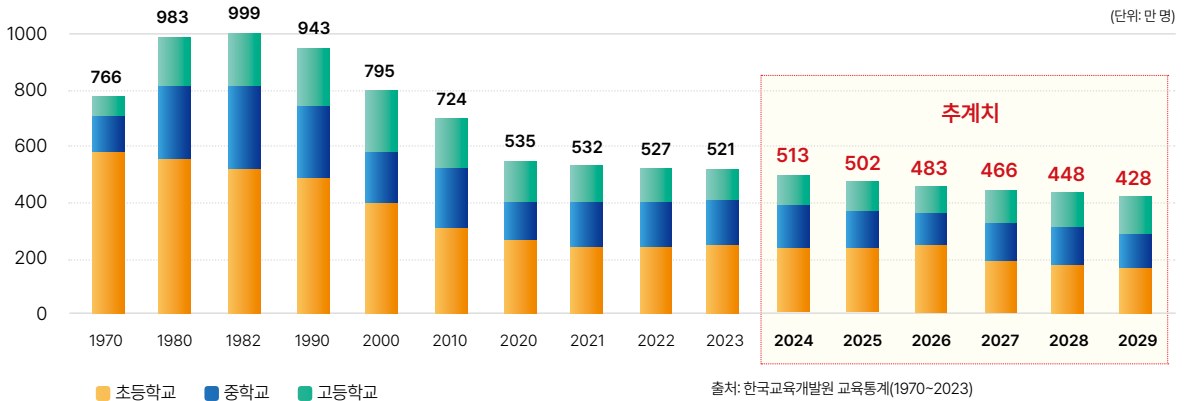
* 혼인 통계에서 혼인율은 백분율 사용 시 수치가 작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천분율(1000분의 1을 하나로 하는 단위)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3.19.

▶ 교육

초·중·고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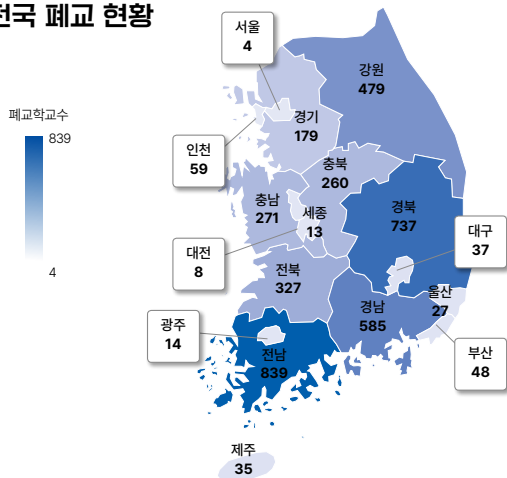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1982년 999만 명 최고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3년 학생 수는 521만 명이었다. '2023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4년~'29년)'에 따르면, 2029년에는 42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학교의 폐교 및 소규모화

2023년 3월 1일 기준, 전국 폐교 수는 3,922개 교이다. 이 중 358개(9%)의 폐교가 미활용인 상태로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1)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 교 중 26.3%인 1,657개 교가 '소규모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학생유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휴교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전국 폐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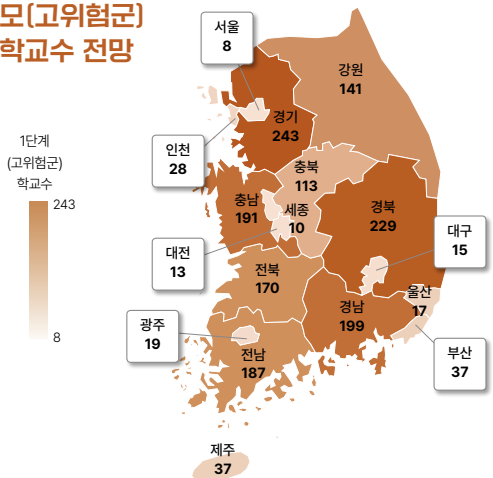


* 전국 폐교 3,922개 중 2,587개(66%)는 매각되었고, 977개(25%)는 활용 중임.

** 폐교의 경우, 학생 수, 학급 수, 통학거리 등을 기준으로 폐교 여부를 결정함.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의 경우 1981년 180명, 1993년 100명, 2006년부터는 60명 이하로 하향 조정되어 왔음.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 2023.

- 소규모(고위험군) 초등학교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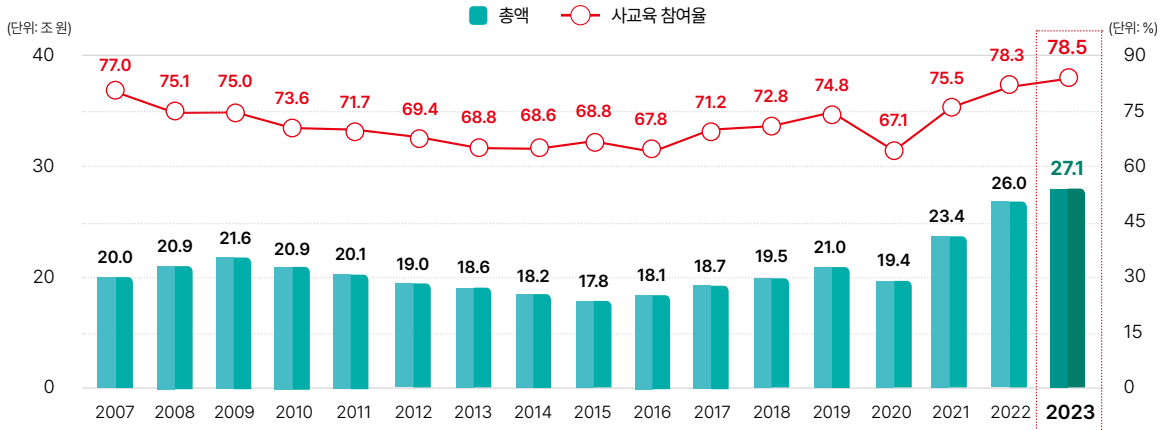
* 해당 연구는 2025년 기준 학교소규모화 지수를 1단계(고위험), 2단계(위험), 3단계(주의), 4단계(위험 보통), 5단계(위험 낮음)로 구분함.

** 소규모 학교의 기준으로 교육부는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제시함. 초등학교 기준으로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읍 지역은 120명, 도시 지역은 240명 이하임. 사·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지역별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2021.12.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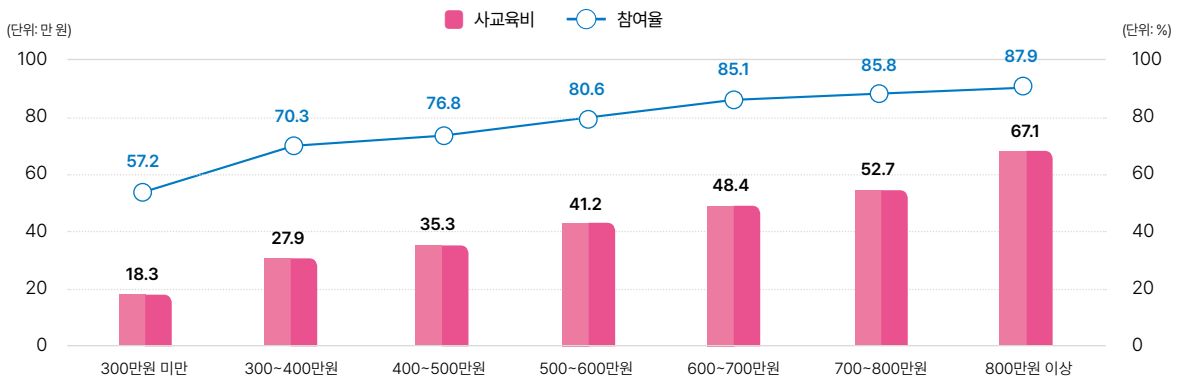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 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78.5%에 이르렀다. 2023년 학생 수는 2022년보다 6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조 1천억 원(4.5%)늘었다.



출처: 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4.3.14.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3년)

2023년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은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67만 1천 원, 87.9%로 가장 높았다. 300만원 미만 가구가 18만 3천 원, 5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출처: 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4.3.14.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와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미활용폐교 활용 특례 규정 개정, 소규모 학교 지원, 학교규모에 대한 법정 기준 명시 등의 법제 개선 논의가 있다. 반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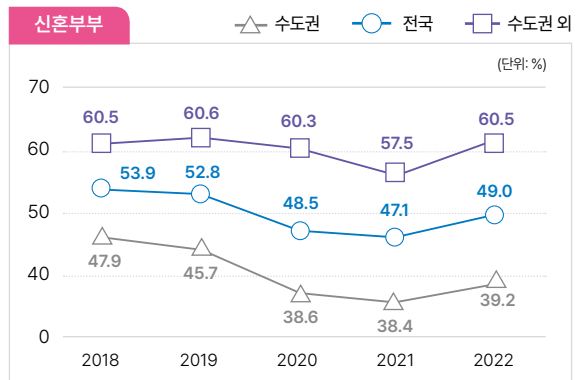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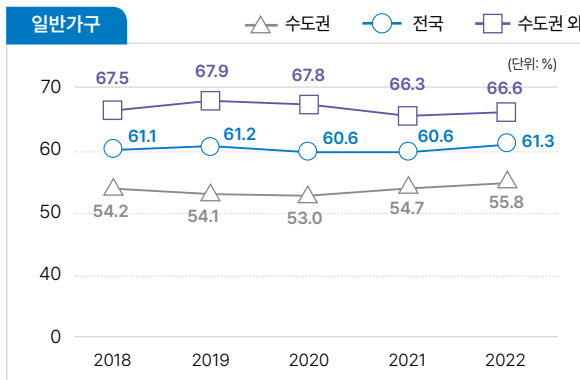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주거

신혼부부 가구 주거 관련 통계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1.3%이나, 혼인기간 7년 이하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49.0%이다.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이 수도권 지역 55.8%, 수도권 이외 지역 66.6%인 것과 비교하여,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수도권 지역 39.2%, 수도권 이외 지역 60.5%로 수도권 지역 자가보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자가보유율은 2020년 이후 40% 아래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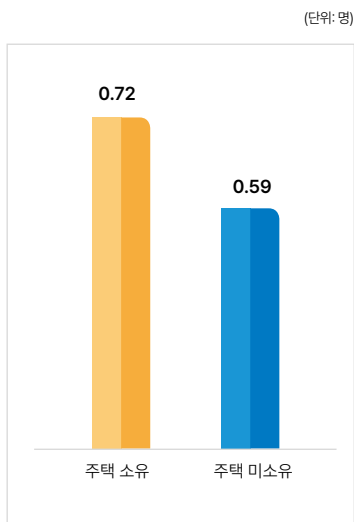


*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정책대상이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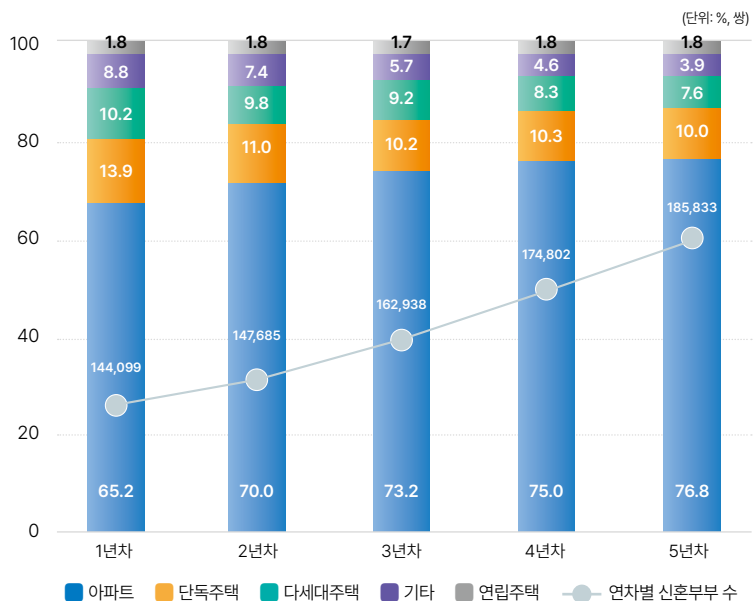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23.4.

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미소유 신혼부부의 자녀 수보다 주택 소유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20% 이상 많고, 이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 소유 유무가 평균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기간 5년 이하 초혼 신혼부부는 거처유형 가운데 아파트를 선호하며,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은 더 높아진다.

주택소유별 평균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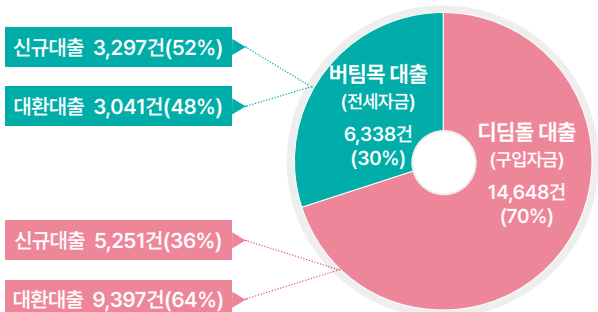
혼인 연차별 거처유형 구성비



출처: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결과, 2023.12.11.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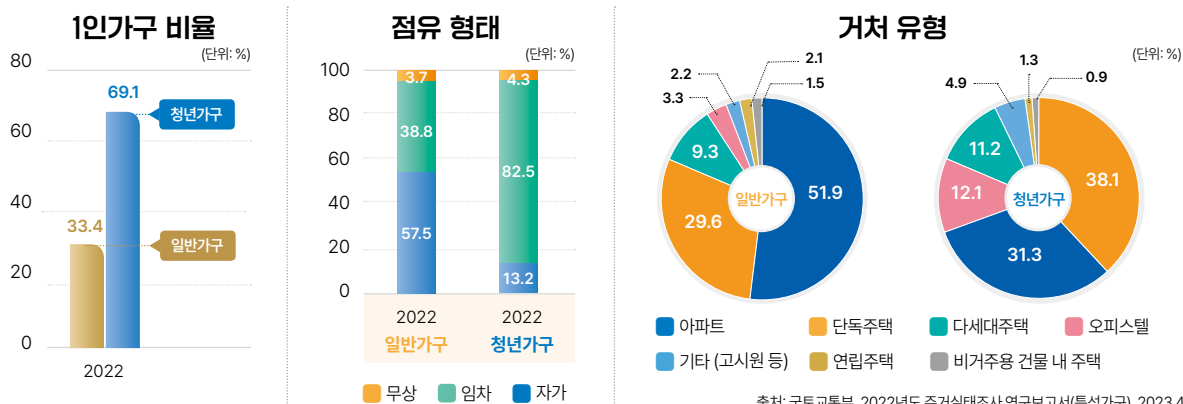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한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2024년 1월 29일 이후 4월 30일 기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14,648건 접수되었고,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6,338건 접수되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5월 20일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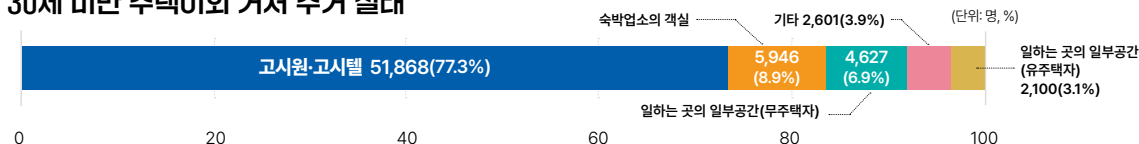
청년가구 주거 관련 통계

2022년 기준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2배 이상이다. 청년가구의 임차거주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2배 이상,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주택이외 거처 거주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3배 이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는 67,143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77.3%가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한다.

30세 미만 주택이외 거처 주거 실태



* 이 조사에서 공표된 결과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준으로 가중값을 보정하여 추정한 값이며, 전국 1만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기타에는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고속도로 휴게소, 노숙인 쉼터, 다중이용업소(노래방, PC방, 사우나, 유흥시설 등) 등 주택이외 거처가 포함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23.5.

유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수보다 약 20% 많다는 점은 주거 안정이 저출생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점적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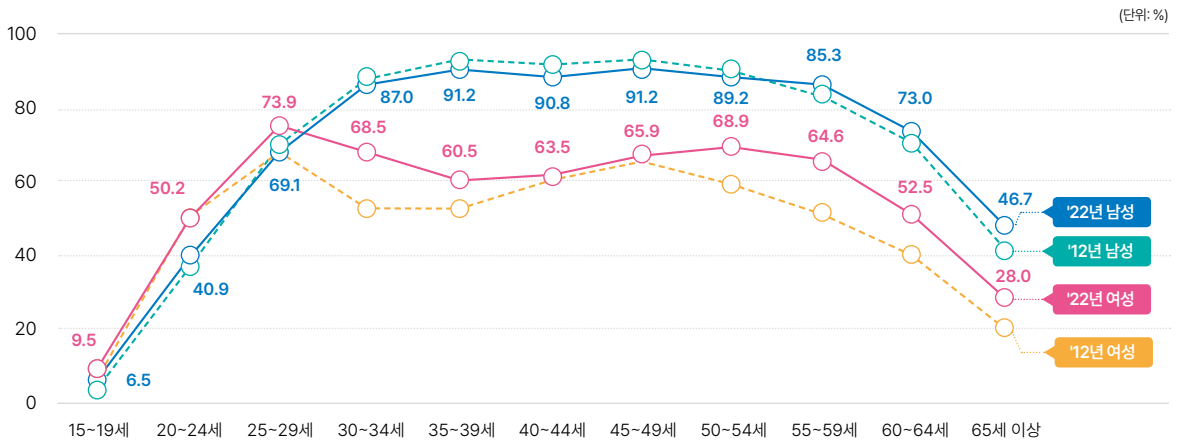
관련 법률

「주거기본법」, 「주택법」, 「주택도시보증법」, 「청년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노동

성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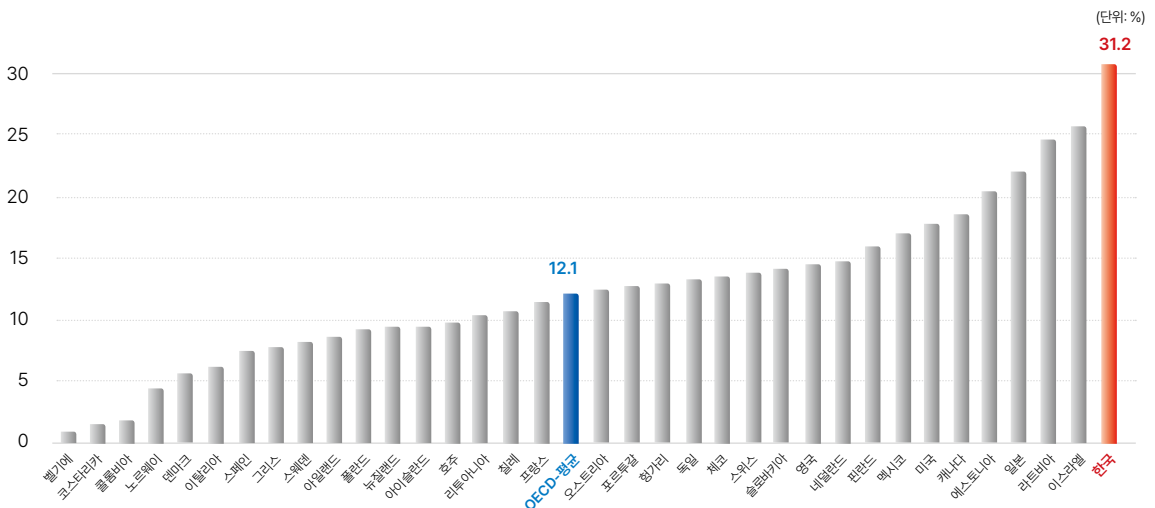
2022년 여성 고용률은 2012년과 비교하여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도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30세 이후 하락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M-커브 모양이 유지되었다. 남성은 2012년과 2022년 모두 여성과 달리 30대에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급속히 상승하여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90%를 상회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2022년 기준, 2023.

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는 여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이 남성 전일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적은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31.2%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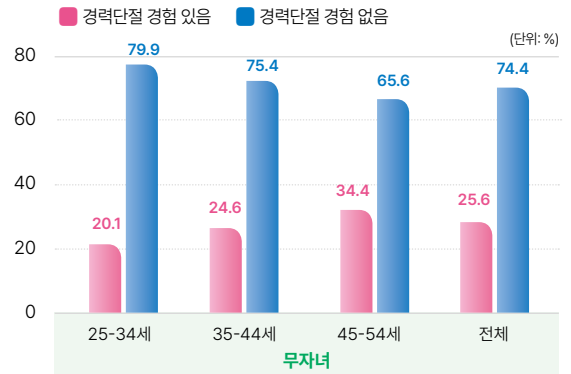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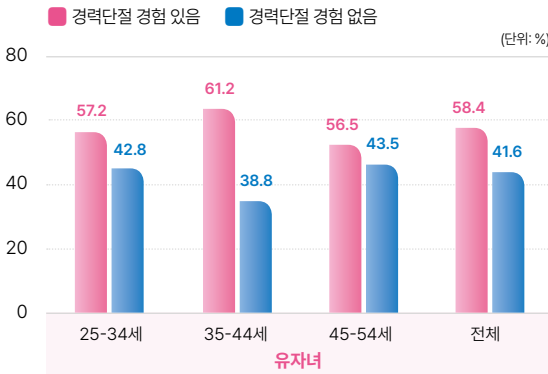
* 위 그래프상 수치는 2022년 또는 각 국별 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반한 수치임.

** OECD 38개국 가운데 최근 중위소득 기준 데이터가 없는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위 표에 표시되지 않음.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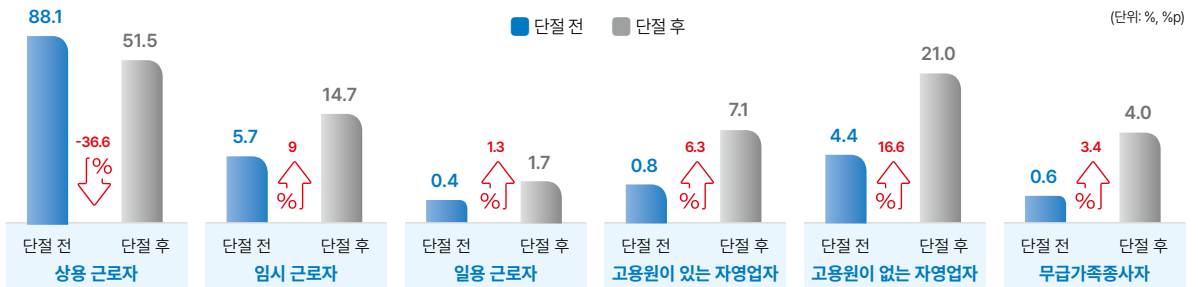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5~54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고, 25~34세의 경우 약 2.8배, 35~44세의 경우 약 2.5배 높았다.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3.

경력단절 전후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 변화

25~54세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 일자리 비율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에 하거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수와 월평균 임금도 감소하였다. 이상을 통해 경력단절 이후 여성의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주 평균 근로시간 -



- 월평균 임금 -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3.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경력의 단절과 일자리의 질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경력단절 이후 이를 이유로 한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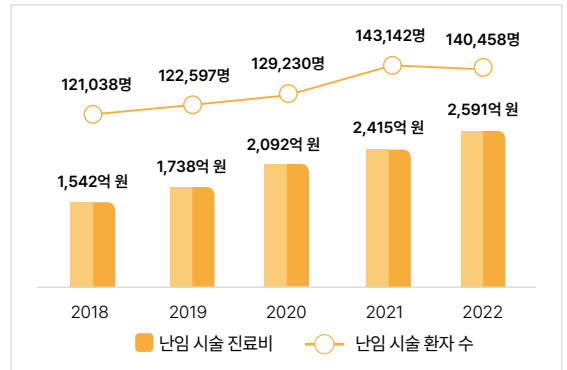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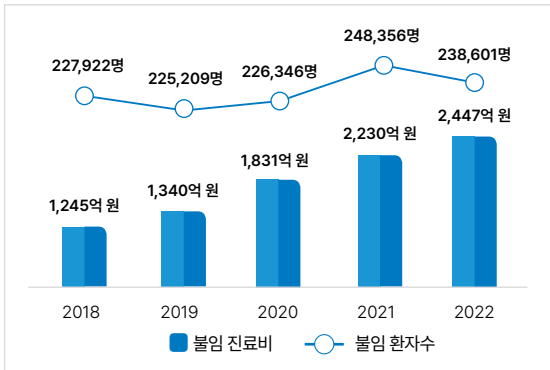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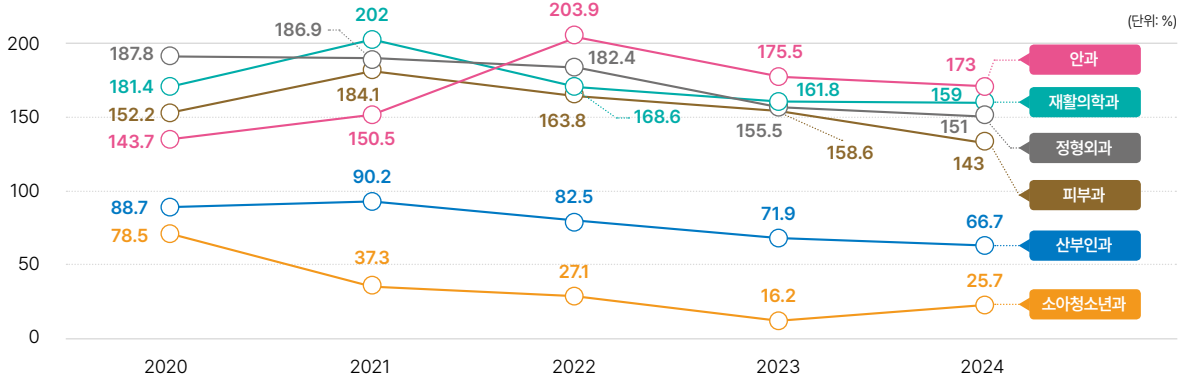
2018년에 비하여 2022년 불임 환자 수는 4.7%, 연간 총 진료비는 96.5% 증가했다. 또한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0%, 연간 총 진료비는 68.0% 증가했다.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2023.5.25.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감소하여, 수련병원에서 필요한 전공의 정원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에 78.5%였는데, 2024년 25.7%로 52.8% 감소했다. 반면, 소위 인기 과인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지원율은 5년 평균 160%를 넘었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전공의와 결원이 발생한 상급년차 전공의를 모집하여 선발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3.12.27.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6798], 2022.11.

지난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의료 지원 관련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저출생과 저수익 등의 이유로 최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 및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과 수련환경 개선, 적절한 의료수가 보상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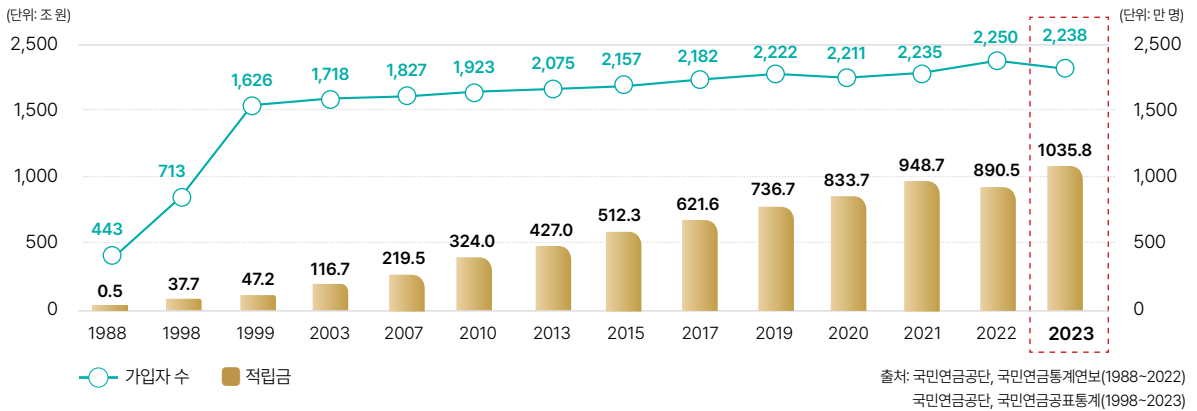
관련 법률

「모자보건법」, 「의료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적립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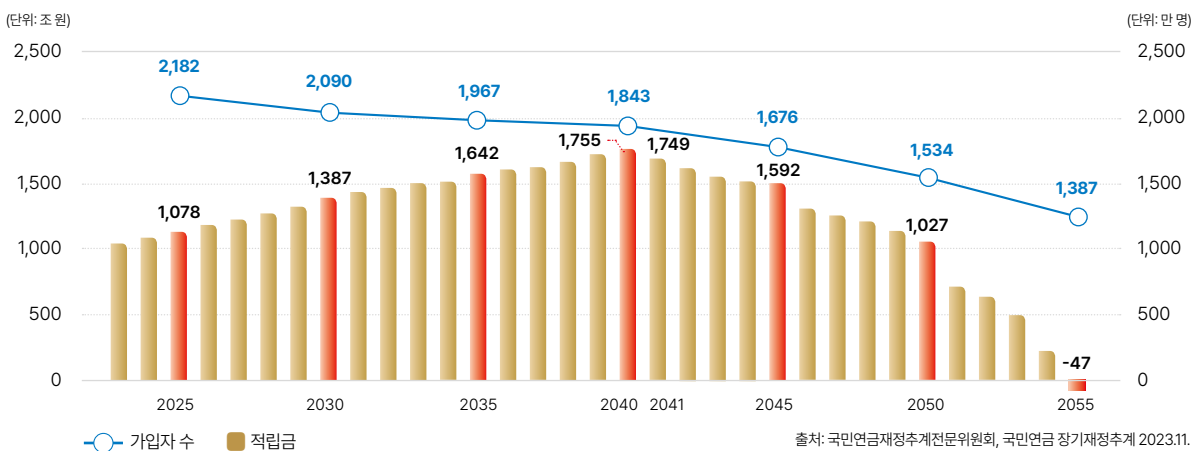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운용규모가 1035.8조 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 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2년 2,250만 명으로 최고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2,238만 명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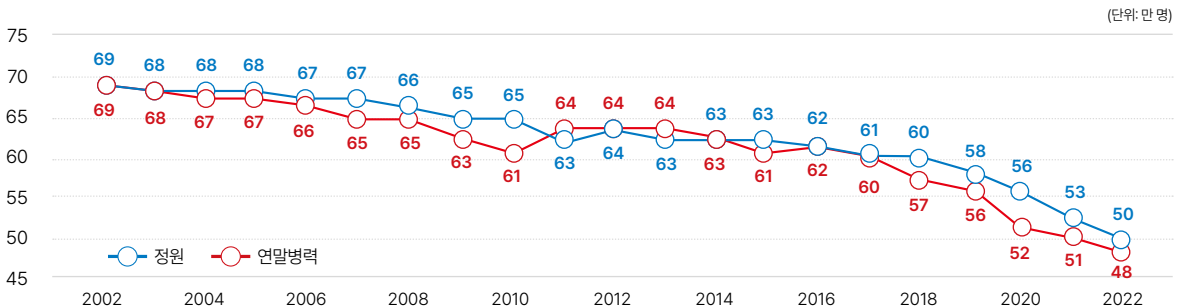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 국방

상비병력 정원과 연말병력 변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과 정부는 인구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병력 수요를 꾸준히 감축해 왔음에도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로 병역자원 확보가 쉽지 않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비병력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연말병력’은 48만 명이였다. 2002년 60만 명 대를 유지하던 연말병력은 2018년 50만 명 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2년 50만 명 대에서 40만 명 대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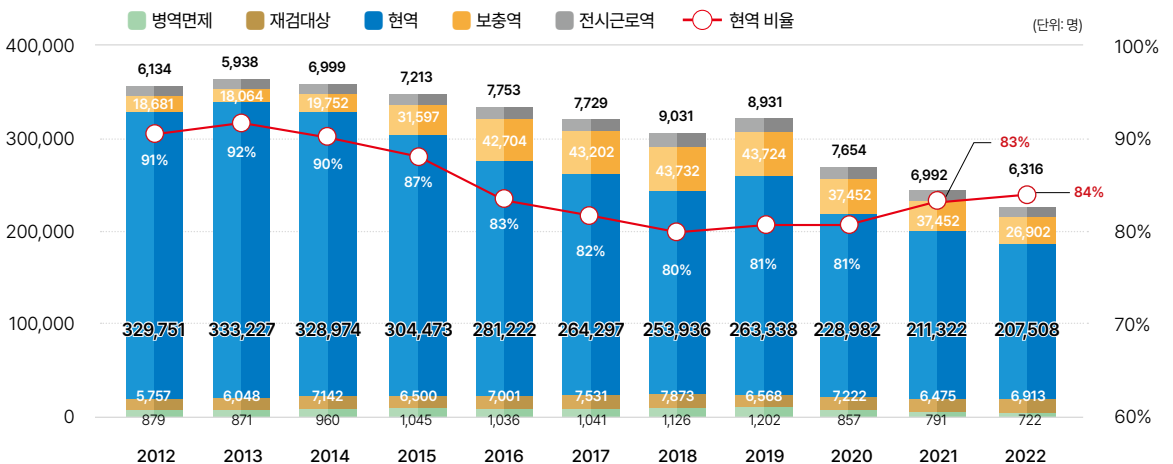


* 연말병력이란 특정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실제 복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한다(「군 인력관리 훈령」 제2조제6호).

출처: KIDA,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2023.

연도별 현역병 판정비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0%대를 유지하던 현역병 판정비율은 2015년 80%대로 들어서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2월부터는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고도비만, 평발, 난시 등의 신체조건에 대해 완화된 현역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출처: 병무청, 2022 병무통계연보, 2023.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20세 남성의 경우 2022년 27만 3,000명에서 2072년에는 11만 2,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구조의 효율적 재설계와 안정적 병력 수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Data & Law 발간 목록

- (1호) 데이터로 보는 국회의원 선거 _ 2023.3.2.
- (2호) 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_ 2023.3.22.
- (3호) 데이터로 보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_ 2023.4.12.
- (4호) 데이터로 보는 국가사이버안보 _ 2023.5.10.
- (5호) 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_ 2023.6.7.
- (6호) 데이터로 보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_ 2023.7.5.
- (7호)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 _ 2023.8.2.
- (8호) 데이터로 보는 스톱킹범죄 _ 2023.9.6.
- (9호) 데이터로 보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_ 2023.10.4.
- (10호) 데이터로 보는 플랫폼 노동 _ 2023.10.25.
- (11호) 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_ 2023.11.22.
- (12호) 데이터로 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_ 2023.12.13.
- (13호)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_ 2024.3.13.
- (14호) 데이터로 보는 근로자 육아휴직 _ 2024.4.26.
- (15호) 데이터로 보는 전세사기 _ 2024.4.30.
- (16호)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_ 2024.5.27.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Data&Law」는 입법과통계서비스
(<https://argos.nanet.go.kr/lawstat>),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6788-4764

<https://law.nanet.go.kr>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ISSN 2982-6241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